



보도 일시	2022. 9. 19.(월) 15:00 (국제엠바고)	배포 일시	2022. 9. 19.(월) 10:00
담당 부서	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	책임자	과 장 이승한 (044-215-2730)
		담당자	사무관 김준성 (jsjohn@korea.kr)

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「2022 한국경제보고서」 발표

① OECD는 9.19일(월) 프랑스 시간 08:00(한국시간 15:00)에 「2022 한국경제 보고서(OECD Economic Surveys: Korea 2022)」를 발표

*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경제동향·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·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

○ 보고서는 ①주요 정책 평가, ②사회안전망 강화, ③청년고용 확대를 구성

② OECD는 한국의 '22년 성장률을 6월 전망 대비 상향조정하였으며,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

① 코로나 위기의 성공적 극복에 이어,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'22년 2.8%(6월 전망대비 +0.1%p), '23년 2.2%(△0.3%p) 성장 전망

* 한은<8월>('22년 2.6%, '23년 2.1%), IMF<7월>('22년 2.3%, '23년 2.1%)보다 성장률을 높게 전망

▪ 물가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'22년 5.2%(6월 전망대비 +0.4%p), '23년 3.9%(+0.1%p) 전망

② 우리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* 도입 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, 이러한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

* ①사회보장기금(현재 흑자)이 제외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하여 준칙을 강화하고, ②시행령 대신 법률에 근거해 구속력을 높이며, ③기존 '25년이 아닌 국회 통과 즉시 시행

** The government announced a **revision to the proposed fiscal rule, which is welcome...** deficit target is to be based on the **managed fiscal balance**, which implies a **tightening of the rule** ... is to be **laid down in law** rather than in the form of a decree, so as to make it **more binding** ... the fiscal rule is to be **put into effect** as soon as the **National Assembly passes it**

③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은 더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

* The new administration's policy shift towards **supporting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... improves the chances of target achievement** and **may reduce cost** compared to previous plans

④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되며, 종부세는 주택 시장 안정 기여, 지속가능한 세 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권고

* **Reducing capital gains taxes** would help **bring underutilised housing** to the market...
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should be revised to **contribute to stabilising the housing market ... the tax burden** should be **shouldered in a more sustainable way**

▪ 그간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납세자의 수용성 저하, 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

* **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has some weaknesses**, including **low acceptability** due to the recent sharp rises in the tax rate and that the **additional tax burden was passed on to tenants**

⑤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제·개정 계획 등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언급

* The government plans to **enact and revise laws on supply chain management** to help ensure stable supply chains of strategically vital goods ... **These steps are welcome**

⑥ 금리 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평가

* The **pre-emptive moves** have helped **keep inflation expectations anchored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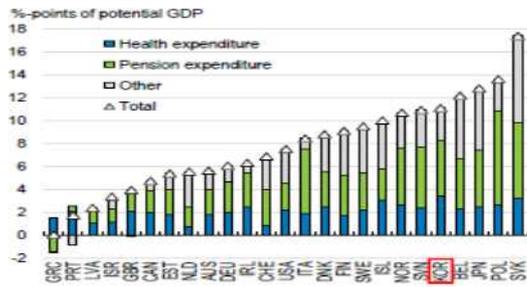
③ **한편 OECD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,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과 상품·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 지적**

①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,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으로 지출압력에 직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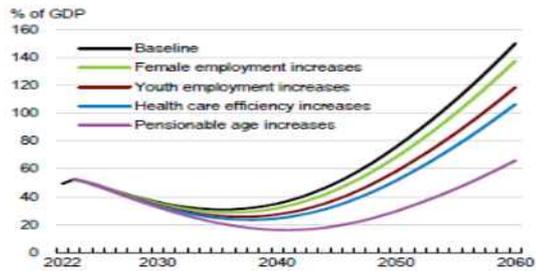
▪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'60년에 140%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,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%에 달하는 수입확대 또는 지출삭감 필요

- 단,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'60년에 약 60%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

< '21년 대비 '60년 총지출 증가폭 >



< 일반정부부채비율 추이 >



-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, 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
 - * **Fiscal consolidation** should proceed gradually, and **support should move from broad-based crisis support toward targeting** households ... those vulnerable to rising living costs
- ② 공적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되어 노인빈곤률이 높은 가운데, 현행 연금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
 -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,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,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·지원수준 상향 고려 권고
 - * **Raise the pension eligibility age, align the maximum contribution age to the pensionable age**
Consider **lowering the basic pension income threshold** and **increasing the benefit level**
 - 퇴직연금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하여 안정적 퇴직소득 창출이 저해되므로, 퇴직일시금 상한·제한사유 설정을 통해 퇴직연금 전환 권고
 - * **Transition severance pay into individual pension accounts** by **capping** and gradually reducing the amount available for early lumpsum withdrawals and **limiting permitted causes**
- ③ 상품·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대-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-비정규직간 임금·사회보장 격차 확대 지적
 -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, 디지털화·R&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권고
 - * Policies that end up unduly **supporting low-productivity SMEs** should be **phased out by systematically re-evaluating the numerous regulations** affecting SMEs and service sectors
 -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을 줄이고 직업훈련·취업상담 비중 확대를 권고
 - * **Reduce spending on direct job creation**, while expanding other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, notably **training** and **job counselling**

4 OECD가 제시한 정책권고는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및 5대 부문 구조개혁 등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

○ 경제체질 개선 관련

- (공공) 재정건전성 강화, 새로운 재정준칙의 채택 및 준수
 - * Gradually **consolidate the fiscal position**, adopt the new fiscal rule and **ensure** the rule is followed
- (연금)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
 - * Pursue a **broad pension reform** to secure adequate old-age income
- (노동) 연공보다는 능력·역량 등에 기반한 임금결정체계 도입
 - * wage-setting mechanisms that are **less rigidly tied to individuals' seniority** and **more weighted towards their actual skills, competencies...** would benefit all economic stakeholders alike
- (교육) 시장수요에 따른 대학의 전공별 정원 유연성 확보
 - * A first step to make universities more responsive to market demands could be **allowing universities to expand admission to departments** related to **emerging or expanding industries**

○ 민간 중심의 경제 역동성 제고 관련

- 부문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,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 확산 등을 통해 상품시장 규제 완화
 - * **Reduce the stringency of product market regulation** by shifting to a **comprehensive negative-list regulatory system**, expanding the use of regulatory sandboxes and **generalising reforms successfully trialled**
- 중소기업 졸업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
 - * **Expand the coverage of SME graduation schemes** to ensure that **public support for SMEs encourages the growth of innovative firms** rather than the survival of non-viable ones

※ 정부는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평가와 권고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할 예정

① 경제회복의 탄력성 제고

-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
-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지속
- 새로운 재정준칙을 채택하고 준칙을 확실히 준수

②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

- 국내 배출량 감축목표에 맞춰 現 배출권 할당 총량을 조정하고,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도 확대
- 전력부문에 대한 탄소비용 전가 및 배출량 감축을 저해하는 제도기반을 포괄적으로 점검
- K-ETS 참여주체에 대한 경매방식 할당(유상할당)을 확대하고, 경매 수입을 친환경 기술 및 인프라 보조금으로 사용

③ 생산성 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

-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, 규제 샌드박스 활용 확대,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 확산을 통해 상품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완화
-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,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 및 훈련을 확대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
- 중소기업 졸업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,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, 취업서비스 등 제공
-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를 추진

④ 사회안전망 강화

-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효과적인 집행조치 시행
- 적정한 고령 소득 확보를 위해 폭넓은 연금개혁을 시행하고, 국민연금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적용대상 축소 및 급여액 인상방안 고려
-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'35년까지 예정된 계획보다 상향시키고, 기대수명과 연계하여 조정 + 이후 최대 납부연령을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조정
- 퇴직일시금 상한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, 허용요건을 제한하여 퇴직일시금을 개인연금 형태로 전환
-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조화

⑤ 청년 고용 제고

- 수능 등 표준화 시험의 영향력을 축소하고,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

* 보고서 원문은 OECD 홈페이지(<http://www.oecd.org>) 참고

1 Part 1: 주요 정책 평가

한국경제 평가 및 전망

- 한국경제는 코로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며 '20년 처음으로 1인당 GDP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등 경제피해를 최소화
 - 효과적인 방역 및 정책지원으로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이후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였으며, 고용도 위기 전 수준 회복
- 향후 한국경제는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'22년 2.8%, '23년 2.2% 성장할 전망
 - 소비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며, 투자는 한국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및 기업투자 계획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 전망
 -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現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'22년 5.2%, '23년 3.9% 상승 전망
 -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, 중국 봉쇄조치,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

< 한국경제 주요 거시지표 전망 >

	'21년	'22년 ^e		'23년 ^e	
		기존전망	수정전망	기존전망	수정전망
■ GDP(전년대비, %)	4.1	2.7	2.8	2.5	2.2
- 민간소비	3.7	2.3	3.7	2.9	2.4
- 총고정자본형성	2.8	0.5	△1.5	2.8	2.8
- 수출	10.8	9.2	4.7	4.1	3.2
■ 실업률(%)	3.6	3.2	2.9	3.1	2.6
■ 소비자물가(전년대비, %)	2.5	4.8	5.2	3.8	3.9
■ 경상수지(GDP대비, %)	4.9	5.3	4.3	5.0	4.0

* '22년, '23년 기존 전망은 OECD 「'22.6월 경제전망(EO)」 기준

거시경제 정책

- (금융·부동산)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팬데믹에도 회복력을 유지 하였으나, 빠르게 상승한 가계부채·부동산가격이 리스크 요인
 - 최근 은행권 부동산 익스포져 및 변동금리 대출 비중 확대, 무담보 신용대출 증가 → 필요시 거시건전성 조치 강화 권고
 - 과거 종부세 인상은 수용성 저하,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야기 → 주택시장 안정 기여,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 권고
- (통화) 선제적 정상화 조치를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하였으며, 명목임금 인상폭도 완만한 수준을 유지
 - 향후에도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지속할 것을 권고
- (재정) 現 정부부채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나, 향후 고령화·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빠른 상승이 예상 →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권고
 - 물가 압력을 가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,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
 - 관리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하며 법률에 근거해 구속력을 높인 새로운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높게 평가
- (공급망) 정부의 공급망법 제·개정 계획을 높게 평가하며,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민·관 협업 강화, 투명성·신뢰성 제고 권고

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

□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노력 필요

-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총 배출량의 74%에 대해 적용되나, 상향된 NDC 목표 대비 배출허용총량이 아직 높음
 - 배출권 무상 할당비중(90%)이 높고, 전력시장 등에서 탄소비용의 전가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
- ⇒ 배출허용총량을 감축목표와 일치시키고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며, 탄소비용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체계 구축 권고

생산성 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

□ 대기업-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

- 중소기업에 차별화된 규제 적용, 보조금 지급, 공공조달 우대 등 보호로 인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가 지연
- ⇒ 저생산성 中企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, R&D·디지털화 지원, 무형자산을 담보로 한 재원조달 등 생산성 제고에 지원 집중

□ 생산성 격차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지며, 부작용 야기

- 대-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는 노동시장에서 정규직-비정규직간 이중구조로 이어져 임금·안전망·고용보호 등의 격차 유발
 - 이러한 격차는 학벌주의를 초래하며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, 노동시장 진입 지체, 미스매치 심화, 결혼·출산 지연 등 야기
 - 여성 교육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직장의 장시간 노동 관행, 불균등한 가사 분담 등이 출산 후 정규직 재취업을 저해
- ⇒ 정규직 보호수준 합리화,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교육분야 개혁도 병행

□ 근로연령층에 대한 안전망 확충 및 근로유인 제고

- 자영업자 등의 저조한 참여로 고용보험 수혜대상이 50% 미만
→ 효과적 이행수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추진
- 사회안전망 수혜자가 저임금 직장 재취업 유인이 낮음
→ 실업급여 하한 하향조정, EITC 적용대상 확대 검토 권고

□ 노후소득보장 개선을 위한 종합적 연금개혁 추진

-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개별 지원수준 미흡
→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혜대상 축소, 개별급여액 상향 방안 고려 권고
- 국민연금은 낮은 소득대체율 등 노후소득보장 기능 미흡
→ 소득대체율·기여율 확대, 기대수명과 연계 등 수급연령 상향 권고
- 퇴직연금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하여 안정적 퇴직소득 창출 저해
→ 퇴직일시금 상한·제한사유 설정 통해 퇴직연금 전환 유도
-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률이 낮고, 보수적 투자로 수익률 저조
→ 위험자산 투자비중 확대 및 자동가입 방식(옵트아웃) 도입 권고

□ 노인건강 보장을 위한 의료분야 개혁 추진

-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 하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, 1차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확충 등 권고
-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급여체계를 조화시키고, 자택 돌봄서비스 서비스 개선 등 불필요한 입원 유발요인 개선

3 Part 3: 청년고용 증대 정책

□ 많은 도전에 직면한 한국 청년

- 치열한 학벌경쟁에 이어 높은 등록금·주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운데, 낮은 고용률·경활참가율 등 미래 불확실성 상존
- 청년고용 부진은 상품·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학벌주의와 교육-노동시장 괴리로 인한 미스매치가 복합 작용
 - 대학 졸업장의 가치가 낮아진 가운데, 처우 수준에 대한 기대치와 낙인효과 우려로 일정수준 이하 일자리 취업 기피

□ 교육개혁을 통한 노동시장과의 미스매치 해소

- 대학 입시경쟁으로 인한 직업교육 관심 저하 등 중·고등학교의 직업교육 기능 약화
 - 마이스터高·일-학습병행제를 확대하고, 획일적 시험제도 비중 축소, 재능·적성 계발을 위한 직업교육·진로상담 기능 개선 권고
- 대학·학과별 정원 경직성으로 노동시장 수요 변화 대응 미흡
→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대학 전공선택·변경 유연성 제고 권고

□ 상품·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청년고용 기반 마련

- 대·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로 인해 임금격차가 발생하고, 이로 인해 유능한 인재의 中企 기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악순환 발생
 - 정규직 고용보호를 합리화하고,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망·훈련 확충 등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권고
 - 한편, 혁신적 中企·벤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자리매김
→ 벤처캐피털·기술기반금융 확충, 中企 디지털 전환 지원 권고
-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,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을 축소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 비중 확대 권고